

서
평

1970년대 독재와 저항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종합 분석

Protest Dialectics: State Repression and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 1970-1979.

By Paul Y. Chang.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홍성태 _고려대학교 강사

오랜만에 완성도 높은 연구서 한 권을 탐독했다. 하버드대 사회학과의 폴 Y. 장(Paul Y. Chang) 교수가 2015년에 내놓은 역작, 『저항 변증법: 국가의 억압과 한국의 민주화운동, 1970-1979』(*Protest Dialectics: State Repression and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 1970-1979*)이 그것이다. 필자가 이 책을 '탐독'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의뢰받았기에 꼼꼼히 읽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관한 서사를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저자의 접근법이 필자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서평을 쓰려니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 서평자로서의 책임과 연구자로서의 관심만으로 『저항 변증법』에 녹여낸 저자의 열정과 노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리해봤다. 글 쓰는 데 기교가 부족한 필자가 이런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론은 누군가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겨 더 많은 독자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럴만한 가치가 충

분하다. 다만, 19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익숙한 국내 연구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사실이나 쟁점은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책은 밀도 있는 짜임새와 명확한 논점, 무엇보다 섬세함이 돋보이는 접근 방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

『저항 변증법』은 국가의 억압과 동원의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1970년대 반정부 투쟁에 나섰던 여러 저항집단들이 박정희 유신체제의 억압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민주화운동의 질적 전환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경험적이고 입체적으로 종합분석한다. 저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신체제의 억압력과 민주화운동의 역동성은 서로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발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하에서 발동된 일련의 긴급조치로 인해 위축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저항집단이 다양한 부문에서 출현하고 전략적으로 진화했음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상정되는 1970년대에 대한 서사를 ‘억압과 동원의 변증법’이라는 분석틀로 재해석하면서 민주화 이행을 촉진하고 오늘날 시민사회의 토대가 된 당대의 중요한 인적 자원과 담론의 발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논증된다.

이러한 내용은 유기적 짜임새를 갖춘 3부 7장의 목차를 구성한다. 1부는 민주화운동의 출현과 전개에 외생변수로 작용한 정치적 맥락을 ‘권

위주의국가의 형성'(1장)과 '권위주의의 공고화'(2장)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여기서 저자는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1972년 유신헌법을 거쳐 더욱더 공고화되는 역사적 배경과 독재를 강화시킨 억압구조의 전략적 특성을 면밀히 살핀다. 이를 배경으로 국가의 억압성이 일련의 긴급조치를 통해 강도와 범위의 측면에서 심화와 확장을 거듭할수록 피상적으로는 저항력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더 많은 사회집단의 저항참여가 질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민주화운동으로 옮겨 '학생운동의 성쇠'(3장), '기독교 행동주의의 출현'(4장), '기자와 법조인의 정치화'(5장)에 주목한다. 앞에서 유신체제의 구조적 억압성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방식에 논의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국가의 억압력이 이들 운동세력에게 영향을 미친 차별적 효과에 대해서 훑어본다. 우선, 저자는 197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 그토록 가혹했던 이유를 1960년대 학생운동의 유산에서 찾는다. 특히,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학생세력의 혁명적 힘과 1964~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운동을 거쳐 더욱 정교해진 조직적 동원전략은 박정희에게 강력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학생세력이 1970년대 저항주기의 정점을 끌어올릴 때마다 박정희는 위수령과 긴급조치를 발동해 운동을 좌절시켰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은 1970년대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박정희 반대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학생운동은 다른 저항집단의 출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1974년 이후 일련의 긴

급조치에 따른 학생운동의 좌절이 불러온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주역들을 차례로 소환해 논의한다. 긴급조치시대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된 기독교 활동가들, 자유언론운동으로 언론탄압에 저항한 기자집단, 그리고 독재의 불의에 도전한 법조인들이 그들이다. 저자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경험한 억압과 저항의 기억으로 1970년대의 운동사적 맥락을 촘촘하게 엮어낸다.

3부에서는 민주화운동이 국가의 억압전략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전술적 적응과 인권의 고양'(6장), '억압과 동맹의 형성'(7장)을 중심으로 더욱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억압이 저항을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저항의 침체기 동안 운동의 '진화'로 표현되는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을 설파한다. 그리고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궤적에서 나타난 운동진화의 장면들, 즉 저항주체의 분화와 전술적 레퍼토리의 적응, 인권 기치의 고양, 더 나아가 이른바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강화된 부문운동의 연대가 국가의 억압전략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 *

민주화운동을 다룬 기존의 수많은 연구와 비교할 때, 『저항 변증법』이 돋보이는 진정한 차별성은 내용이라기보다 그 논증에 필요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혼합방법'의 전략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민주화운동연구가 주로 사건과 인물 중심의 서사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저자가 풀어내는 혼합방법의 전략은 기존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체화하고 때로는 논점에 따라 재구성하는 사회과학적 분석의 힘을 더한다. 이 대목에서 저자의 연구방법에 사용된 중요한 자료의 원천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217-221쪽)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에서는 질적 자료의 출처로 크게 세 가지가 소개된다. 첫째는 200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발간한 두 편의 사료모음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 1970년대 간첩·노동사건·단체편』과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 1970년대 사건편』이다. 두 번째 자료원은 1975년 미국에서 결성된 북미한국인권연맹(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이 수집한 자료(1975~1992)로, 1995년부터 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 보관 중인 95 박스 분량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관한 UCLA 기록물 모음』(*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Archival Collection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in Korea*)이다. 세 번째 자료원은 1987년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총 5권으로 나누어 발간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이다. 이러한 사료들에 더해 저자는 유신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활동가, 기자, 변호사, 교수 및 문인 등 각계 20명의 인사를 오랜 기간에 걸쳐 심층면접한 내용으로 질적 자료를 보강했다.

다른 한편,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저자가 직접 참여한 스탠포드 한국민주주의 프로젝트(Stanford Korea Democracy Project)의 연구자료를 이용했다. 2007년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공개된 이 자료는 한국 민주화운

동의 역동적 궤적(1970~1992)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앞서 질적 자료의 주요 원천으로 소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초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해 정량적으로 가공한 연구결과물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 1970~1979년의 저항사건(1,845건)과 억압사건(1,043건) 그리고 기타 사건(66건)에 관한 분석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운동집단별 저항사건의 발생빈도를 비교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었다. 또한 국가의 억압전술과 운동의 저항전술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다양하게 진행되었는지, 저항사건에 대한 억압의 범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운동집단별로 주로 사용하는 저항전술은 무엇이었는지, 저항의 레퍼토리에서 비파괴적 전술(nondisruptive tactics)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항사건의 이슈와 운동집단의 특성은 어떤 형태로 연결되었는지, 운동집단 사이의 연대는 시계열적으로 어떤 형태의 궤적을 형성했는지 등에 관한 경험적 분석결과를 질적 연구와 접목시켜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한층 더 정교하게 재구성했다.

* * *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하듯이, 『저항 변증법』도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성과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억압과 동원의 변증법을 분석틀로 삼아 기존의 담론체계를 재구성하면서 다양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역사와 이론의 대화를 균형감 있게 중재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서평자로서 이 책을 읽고 느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1970년대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가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다. 저자가 주장한 억압과 동원의 변증법은 과연 1960년대, 특히 1980년대에는 발견되지 않는 1970년대의 고유한 현상인가? 그렇다면, 1970년대에 도드라진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권위주의국가에 도전하는 민주화운동이 태생적으로 억압과 동원의 변증법 현상에서 이탈하는 것이 가능한가? 박정희시대의 억압사와 저항사가 상호교차하면서 만들어낸 유신과 반유신의 전략적 유산이 1980년대 독재와 반독재의 변증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1970년대에 갇힌 듯한 인상은 단순한 오해인가?

저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스탠포드 한국민주주의 프로젝트(Stanford KDP)의 1980년대 분석자료를 동원해 억압사와 저항사의 비교역사적 시야를 조금 더 넓혔다면, 1970년대 억압과 동원의 변증법이라는 의미가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음이 저자가 설정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거나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 서평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두 경우 모두 이 책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기대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아쉬움은 억압과 저항이 상호작용하는 서사구조를 조금 더 정교한 이론적 논의로 발전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저항에 대한 억압사’와 ‘억압에 대한 저항사’가 복잡하게 얽힌 서사구조를 억압과 동원의 변증법이라는 비교적 명료한 분석틀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특히, 단일

한 국가권력이 복수의 저항집단과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억압전략의 차별적 효과를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완결성을 더하는 작업에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에 대한 이론적 통찰의 일반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책의 적시적소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다분히 명제화된 저자의 분석적 접근이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론의 성찰이나 전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졌다면 어떠했을까?

이 책에 대한 또 다른 아쉬움은 풍부한 경험적 자료 및 사료와 대비되는 선행연구의 상대적 빈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민주화운동연구가 주로 1980년대의 저항사건들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어 1970년대의 잊혀진 저항사를 복원하고 재평가하기 위한 여러 집단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원한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차성환 외, 2005)와 『유신과 반유신』(안병욱 외, 2005)을 들 수 있다. 이 책이 한국어로 출간된 다른 문헌을 적지 않게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70년대 저항사건을 (재)조명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게 다루어진 점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저항 변증법』의 개정판 또는 한국어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에서 정정했으면 하는 역사적 사실과 오자(misspelling)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44쪽에서 서술한 민족일보 조용수의 사형집행일은 1961년 12월 20일이 아니라 21일이다. 참고로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이 선고된 날짜는 8월 28일, 사형확정 일자는 10월 31일이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기에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옥에 티’가 하나 있다. 154쪽 <그림 6.1> 그래프에서 범례로 지

정한 ‘비파괴적 전술의 비율’에 ‘Nondisruptive’가 오자로 입력됐다. 개정판이나 한국어판 출간을 기회로 수정하길 바란다.

* * * *

1970년대 독재와 저항의 끝자락에 부·마항쟁이 있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부·마항쟁과 같이 짧고도 강렬한 파열음으로 사회변동의 결정적 국면과 조우한 사례는 없었다. 물론 유신체제의 몰락을 독재 권력의 자기균열 과정에서 우발적인 요소가 개입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의 자기균열을 이끌어내고 이를 증명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도시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저항, 바로 부·마항쟁이었다. 비록 『저항 변증법』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이런 점에서 1970년대 억압과 동원의 변증법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직업으로서의 운동가’로 변신한 학생, 기자, 변호사, 재야인사 등이 아닌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에서 묵묵히 시민적 삶을 추구했던 수많은 평범한 대중이 아니었나 싶다.

부·마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또한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앞둔 올해, 우리사회는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왜곡된 역사는 ‘좌파독재’라는 형용모순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당당히 외쳐대는,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독재자의 진정한 후예들에게 하나의 종교이자 양식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에서 ‘왜, 어떻게,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로 한걸음 더 내딛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서평자는 풀 Y. 장 교수가 쓴 『저항 변증법』이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관한 새로운 기억법을 선사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열정과 노력을 통찰이 더해진 후속연구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